

사 회

문 1.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직 14년)

갑 :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되어 있어. 결국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특정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부모를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을 :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얼마만큼 사교육을 받았는지가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지. 기득권층 자녀는 부모 덕으로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야.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 불평등은 재생산되는 것이지.

- ①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 ④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①

1. 박스의 검토

- (1)부모, 환경 보다는 개인의 능력, 노력을 강조하므로 갑의 견해는 기능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 (2)개인의 능력 보다는 부모, 환경을 강조하므로 을의 견해는 갈등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2. 지문의 검토

- ① 기능이론(갑)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많은 소득을 갖는다. 결국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 ② 기능이론(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 ③ 갈등이론(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능력, 노력)과 상관없이 개인 간의 갈등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 ④ 갈등이론(을)에 의하면 차등적 보상 체계는 사회적인 박탈감,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문 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14년)

갑 :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봐야지.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정당보다 후보자의 됴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봐.

을 : 날아 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떤 후보를 뽑느냐보다는 어떤 정당에 투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

- ①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정답 ②

1. 박스의 검토

갑은 정당보다 후보자 개인을 중요시하므로 사회명목론에 입각하고 있다.

을은 후보자 개인보다는 정당을 중요시하므로 사회실재론에 입각하고 있다.

2. 지문의 검토

사회를 개인들의 총합으로 보는 것은 사회명목론(갑)의 견해이다.

문 4.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국가직 14년)

(단위:천 가구,%)

지역	연도	총 가구 수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기타 가구*	계
				(한)부모와 미혼 자녀	(한)부모와 기혼 자녀			
A	1990	5,000	6.6	70.1	0.4	7.7	15.2	100
	2010	10,000	11.8	54.5	0.7	4.3	28.7	100
B	1990	3,000	10.1	62.4	1.4	14.2	11.9	100
	2010	2,500	14.2	43.4	0.4	1.0	41.0	100

※ 기타 가구는 1인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등을 포함함.

-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
- 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 ④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정답 ④

1. 가족제도의 형태

확대가족은 두 세대 이상의 기혼부부가 함께 사는 형태이고, 핵가족은 부부가구 또는 부부가 그 미혼자녀들과 함께 사는 형태이다.

2. 지문의 검토

- ① 기타 가구에 4세대 이상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확대가족비율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② 부부가구도 핵가족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에서 기타 가구가 모두 4세대 이상 가구라고 할지라도 핵가족의 구성비율이 훨씬 크므로 핵가족의 수가 확대가족의 수보다 많다.
- ④ 2010년의 경우 B지역에서 1세대 핵가족(부부 가구)의 수는 355개(단위 : 천 가구)이다. 2010년의 경우 A지역에서 1세대 핵가족(부부 가구)의 수는 1180개(단위 : 천 가구)이다. 결국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문 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국가직 14년)

A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넓히려고 한다. 이에 A시는 법률에 따라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갑의 집을 적법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 ① 주민소송
- ② 사법상 손해배상
- ③ 행정상 손실보상
-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정답 ③

갑이 토지수용에 불복한다면 토지수용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토지수용은 받아들이고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행정상 손실보상이 적절하다.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토지를 수용하면 갑은 특별한 희생을 당하기 때문이다.

문 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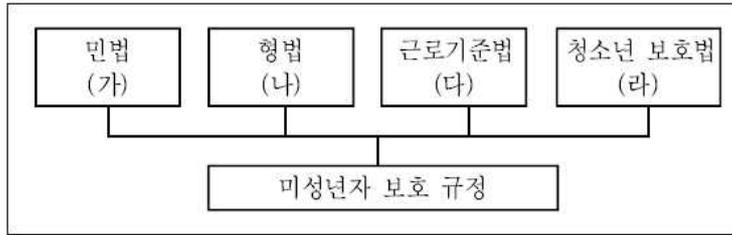
(국가직 14년)

-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 ④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 의하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언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문 8.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직 14년)



- ① (가) -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나) - 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 ③ (다) - 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라) - 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정답 ④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므로 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문 9.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국가직 14년)

- ①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②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④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답 ③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결함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결함으로 손해를 추정함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10.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국가직 14년)

○○ 신문 0000년 00월 00일

○○법원은 갑이 “A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에는 인격·신분·재산 등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 중 국민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인격권이 우선한다고 보고, 이 사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했다.

- ①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 ③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정답 ①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 13.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직 14년)

- ①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 ②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 ③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 ④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정답 ②

- ①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 ③ 1969년 6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허용되었다.
- ④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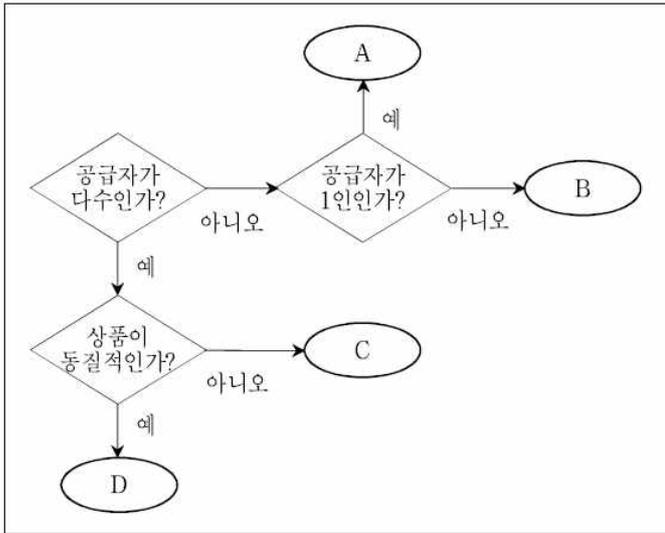
문 15.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국가직 14년)

-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 ③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 ④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정답 ③

1인 1표제에서는 비례대표(전국구)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지 못하므로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

문 16.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국가직 14년)



- ① A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 ②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 ④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③

1.그림의 검토

A는 공급자가 1인이므로 독점이고 B는 공급자가 다수가 아니므로 과점이다. C는 공급자가 다수이면서 상품이 차별적이므로 독점경쟁이고 D는 공급자가 다수이면서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완전경쟁이다.

2.지문의 검토

- ①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되는 시장은 과점시장(B)이다.
- ② 과점(B)시장에서는 공급자가 2명 이상이므로 대체재가 존재한다.
- ③ 독점경쟁(C)시장은 독점의 요소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이다.
- ④ 완전경쟁(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문 17.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 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국가직 14년)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00	190	180	170	160	150
공급량(개)	140	160	180	200	220	240

-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360개이다.
-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정답 ④

- ① 균형에서는 수요가격=공급가격과 수요량=공급량이 성립한다. 위의 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두 180개이고 가격이 1,800원일 때 균형이다.
- ② 가격이 1,600원일 때 공급자는 240개를 판매하고자 하지만 소비자가 150개만 구입하므로 90개를 판매할 수 없다.
- ③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Y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재이므로 X재 수요가 감소하고 X재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결국 X재 균형가격은 1,000원 이하가 된다.
-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수요량=공급량은 성립하지만 수요가격-공급가격=600원이 성립한다. 위의 표에서 수요량=공급량=160개이고 수요가격=1,400원과 공급가격=800원일 때 위의 조건이 성립한다. 결국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 180개보다 20개 줄어든다.

문 18.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국가직 14년)

- | |
|-----------------------------------------------------------------------------------------------------------------------------|
| <p>○ A프로젝트는 2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연 9.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p> <p>○ B프로젝트는 4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0%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p> |
|-----------------------------------------------------------------------------------------------------------------------------|

- ① 8.1% ② 7.1%
- ③ 6.1% ④ 5.1%

정답 ②

- (1) A프로젝트에 투자하면 1년 후에 $200만 \times 9\% = 18만$ 원을 수익을 얻는다.
- (2) B프로젝트에 투자하면 1년 후에 $400만 \times x\%$ 의 수익을 얻지만, 추가로 2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비용은 $200만 \times 5\% = 10만$ 원이다. 결국 B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순수익은 $400만 \times x\% - 10만$ 원이다.
- (3) 갑은 $18만 \text{원} < 400만 \times x\% - 10만 \text{원}$ 이 성립할 때 B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만족하는 B프로젝트의 수익률은 $7\% < x$ 이다. 결국 B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수익률은 7.1%이다.

문 19.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국가직 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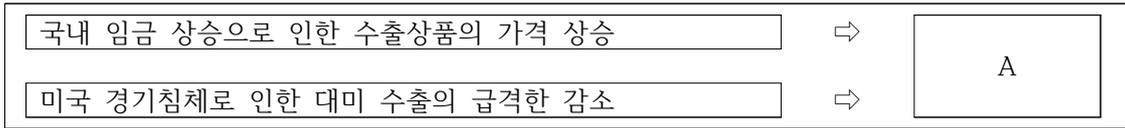
구 분	A국	B국	C국
경제성장률(% , 전년대비)	4.5	6.2	- 2.3
인구증가율(% , 전년대비)	5.2	4.5	3.3
물가상승률(% , 전년대비)	5.0	5.2	10.4
실업률(%)	3.6	4.3	7.6

- ①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 ③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정답 ④

- ① 실업률만 가지고는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업자의 수도 비교가 불가능하다.
-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이다. A국은 9.5%이고 B국은 11.4%이며 C국은 8.1%이다. 결국 명목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 ③ 실질 GDP 증가율을 가지고는 실질 GDP의 증가액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 GDP의 증가액을 비교할 수 없다.
-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서 인구증가율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A국은 -0.7%이고 B국은 1.7%이며 C국은 -5.6%이다. 결국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문 20.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러 환율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국가직 14년)



- 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감소한다.
-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정답 ③

1. 박스의 검토

- (1) 국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수출상품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출이 감소한다. 수출이 감소하면 \$ 유입이 줄어들므로 외환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 (2) 미국의 경기가 침체하면 소득감소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수출상품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출이 감소한다. 수출이 감소하면 \$ 유입이 줄어들므로 외환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2. 지문의 검토

- ①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증가한다.
- ②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므로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므로 달러를 구입하여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 ④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이 때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달러를 보유하게 되므로 유리해진다.